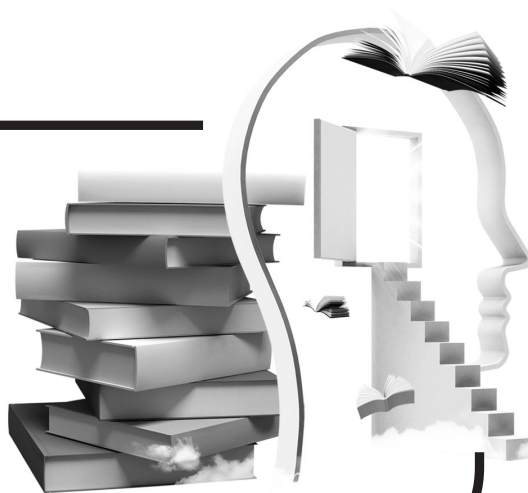


2016 인문학 포럼

경계에 선 인문학 : 전망과 제안



일시_ 2016. 9. 30.(금) 13:30~18:00

장소_ 아주대학교 영상회의실(울곡관 151호)

■ 주최_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 주관_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후원_ 아경장학재단

목 차

I. 행사일정 / 3

II. 개회식

- ◆ 초대인사: 박만규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장, 아주대학교 인문대학장) / 7
- ◆ 환영사: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 / 9
- ◆ 축 사: 배성근 (교육부 교육정책실장) / 10
- ◆ 축 사: 김형균 (아경장학재단 이사장) / 12

III. Session I

좌장: 심치열 (성신여자대학교 인문대학장,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부회장)

- ◆ 「인문교육의 복권을 통한 인문학 진흥의 길」 / 17
- 손동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 대전대학교 석좌교수)
- ◆ 「인문학의 공공성-현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 31
- 김태승 (아주대학교 교수)
- ◆ 「고등교육과 인문학」 / 40
- 최진규 (조선대학교 인문대학장,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부회장)

IV. Session II

좌장: 조광순 (아주대학교 교수)

- ◆ 「회사가 바라보는 인문학 전공자란?」 / 53
- 김경원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장, 전 대성합동지주 사장)
- ◆ 「교육부의 인문학 정책방향」 / 58
- 고영종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V. Group Discussion / 71

좌장: 백영서 (연세대학교 인문대학장)

발표자: 조성택 (고려대학교 교수), 박찬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기봉 (경기대학교 교수), 문혜원 (아주대학교 교수)

VI. 부록

-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 회원교 명단 / 83
-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 임원진 명단 / 84



2016 인문학포럼 **행사일정**

2016 인문학 포럼

경계에 선 인문학: 전망과 제안

- 일시: 2016.9.30.(금) 13:30~18:30
- 장소: 아주대학교 영상회의실(율곡관 151호)
- 주최: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 주관: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후원: 아경장학재단
- 세부일정

13:00~13:30	등 록(율곡관 영상회의실)
개 회 식	
사회: 조하연(아주대학교 교수)	
13:30~13:50	개 회 사 박만규(아주대학교 인문대학장,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장)
	환 영 사 김동연(아주대학교 총장)
	축 사 배성근(교육부 대학교육정책실장)
	축 사 김형균(아경장학재단 이사장)
Session I	
좌장: 심치열(성신여자대학교 인문대학장,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부회장)	
13:50~15:20	「인문교육의 복권을 통한 인문학 진흥의 길」 손동현(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 대전대학교 석좌교수)
	「인문학의 공공성-현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태승(아주대학교 교수)
	「고등교육과 인문학」 최진규(조선대학교 인문대학장,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부회장)
Session II	
좌장: 조광순(아주대학교 교수)	
15:40~16:50	「회사가 바라보는 인문학 전공자란?」 김경원(세종대학교 경영대학장, 전 대성합동지주 사장)
	「교육부의 인문학 정책방향」 고영종(교육부 학술진흥과장)
Group Discussion	
좌장: 백영서(연세대학교 인문대학장)	
16:50~18:00	조성택(고려대학교 교수), 박찬길(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기봉(경기대학교 교수), 문혜원(아주대학교 교수)
18:10~	만찬

2016 인문학 포럼에 참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학구조조정, PRIME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등으로 인문계 학과의 정원이 대폭 감축되면서 현재 한국의 인문대학들은 숨고를 겨를도 없이 심각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지켜왔던 인문학 생태계가 전에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인문학의 발전을 통해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일이 매우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문학의 역사에서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는 물론 대학 안에서조차 인문학의 위상이 오늘날처럼 도전받았던 때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인문학의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문학의 창조하는 데 우리의 역량과 지혜를 모으는 일이 절실합니다.

현재 인문학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인문학과 인문 교육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회의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인문학이 성찰과 비판의식을 통해 깊이 있는 사유의 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 사고를 키운다는 점, 과학자와 공학자 그리고 기업인과 정책 담당자들에게까지도 인문학적 사유가 실질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봉착한 이유와 환경에 대해 냉철한 분석과 비판을 제기하는 한편, 인문학자들 역시 책임 있는 태도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 속에서 인문학의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인문학자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 속에서 삶의 의미와 여유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불행을 남의 것처럼 방관하는 것은 우리 인문학자들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은 인문학자 고유의 책임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본 학술대회는 대학은 물론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신 명망 있는 분들을 모시고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한 시간을 아끼어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회장
아주대학교 인문대학장

박만규

2016 인문학 포럼을 우리 학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아주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삶이 전에 없이 풍요로워지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로 사회, 분노 사회 등 우리 사회를 지칭하는 그리 반갑지 않은 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다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성찰과 대화가 필요하며, 인문학의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대학은 인문학의 보루로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문학이 처한 현실과 인문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 등을 진지하게 점검하고, 새롭게 나아갈 바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2016년 인문학 포럼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한국의 인문학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아주대학교 총장 김동연

‘2016 인문학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정책실장 배성근입니다.

먼저, 사립대학 인문대학장 협의회가 주관한 ‘2016 인문학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과학 기술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인문학적 사고와 상상력 등 집단지성과 창의성의 원천이 되는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은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어 사회로부터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인문학의 위축과 침체를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토대가 되고, 국가경쟁력과 사회발전의 원천이 되는 기초학문이자, 전통적으로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인문학이 위축되고 흔들리는 것은 학문의 큰 방향을 잃는 것이 되고, 그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일 것입니다.

그간 교육부는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자들에 대한 “기초연구” 및 “한국학 진흥” 사업 등을 통하여 인문학 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문도시’ 및 ‘석학인문강좌’ 등 인문학 대중화사업을 통하여 연구 성과 확산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대학에서의 인문학 교육과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인문학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2016 인문학 포럼’은 인문학에 대한 전망과 제안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인문학 진흥과 발전방향을 같이 모색하고, 고민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부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제안들에 귀기울여 인문학 정책에 답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6 인문학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참석 하신 여러분과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배 성 근

2016 인문학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경장학재단의 김형균 이사장입니다.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와 아주대학교 인문대학이 공동 주최하는 2016 인문학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문학은 좁게는 모든 학문의 근간이고, 넓게는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정신문화를 지탱하는 기초가 됩니다. 날로 각박해지고, 치열해지는 세계적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 사회의 인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책임지는 인문학이 올곧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랜 인류의 역사로부터 얻은 부인할 수 없는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인문학과 인문적 교양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인문학적 성찰을 강조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로 인문학의 가치가 날로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 우리가 속한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인문학의 역할을 주제로 학계와 사회의 명망 있는 분들이 함께 하여 광범위한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아경장학재단은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의 뜻을 모아 설립된 재단으로 그동안 글로벌 역량을 지닌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해 모교의 후학들을 성심을 다하여 후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문학적 사유 능력이야말로 전문경영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하고 아주대학교의 인문대학을 꾸준히 지원해 왔습니다. 아주대학교 인문대학이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와 더불어 인문학의 가치를 새롭게 확인하게 될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더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디 이번 포럼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문학의 사명이 생산적으로 논의되고, 그 성과가 사회의 곳곳에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놓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 애써 주신 조직위원회 여러분과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경장학재단 이사장 김형균



Session I

좌장: 심치열

(성신여자대학교 인문대학장,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부회장)

- 인문교육의 복권을 통한 인문학 진흥의 길

손동현(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 대전대학교 석좌교수)

- 인문학의 공공성-현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태승(아주대학교 교수)

- 고등교육과 인문학

최진규(조선대학교 인문대학장,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부회장)

인문교육의 복권을 통한 인문학 진흥의 길

손동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 대전대학교 석좌교수)

1. 문제의 핵심

90년대 후반 이래 대학가에서는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논란이 무성(茂盛)했다.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진단이 여러 갈래로 이루어지고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적잖이 모색되었지만,¹⁾ 그 외양의 무성함에 비해 인문학의 지식생태계는 여전히 활기를 찾지 못하고 날로 쇠퇴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 모든 노력이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문학이 인문교육과 유리되어 있는 교육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인문학 연구가 ‘학문후속세대’로 이어져야 하고, 이들의 연구 성과가 중등 및 고등교육과정의 인문교육에 지속적으로 영양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가 막혀 있는데 전자가 잘 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인문학과 인문교육의 연계관계를 중등 및 고등교육과정에서 다시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의 통념과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이를 가로막고 있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한국의 교육은 전반적으로 질적 부실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인문학에 대한 외부의 위협: ‘시장주의’

1998년의 외환 위기 이래 한국에서도 이른바 냉혹한 시장원리를 금과옥조(金科玉條)시하는 ‘신자유주의’가 추락한 경제를 살리는 지침으로 준봉(遵奉)되어 왔다. 그로부터 10년 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이른

1) 정부에서 시행해 온 HK사업; CORE사업; ‘석학인문강좌’/‘시민인문강좌’/‘길 위의 인문학’/‘인문도시’/‘세계인문학포럼’ 등의 사업,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바 미국발 국제금융 위기가 세계경제를 뒤흔들자, 미국 내에서는 그간 신봉해왔던 이 신자유주의의 지도력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가 있었다. 하지만, 경제를 오로지 ‘자유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시장주의’는 여전히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보편적 원리로 타당시되고 있다.

시장, 엄격히 말해 ‘자유시장’이란 어떤 곳인가? 시장에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판다. 그런데 그 물건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상품’이다. 추상의 극치를 구현하는 화폐가 매개체가 되어 역시 온갖 욕구충족 가능성이 획일적으로 동질화-추상화되고 압축된 ‘상품’이 ‘거래’되고 ‘교환’되는 곳이 시장이다. 거기서 사람들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유가 보장된다는 뜻에서 그것은 ‘자유시장’이다.

시장이 요구하는 행동방식은 합리적 이기심이다. 여기서 합리성이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철저히 ‘도구적 합리성’이다. 사회공동체가 그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일반적인 도덕적 규범도 여기서는 유보된다. 이러한 시장이 국경도 없이 전세계로 확장되어 하나가 되는 현상이 곧 ‘세계화’다.

전 세계의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됨으로써 추상적 합리성에 대한 요구는 극단으로 치닫는다. 거기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아니 살아남으려면, 좌우를 돌보지 않는 맹목적 이기심으로 고압 충전된 냉혹한 합리성만이 십이분 발휘되어야 한다. 도덕적 규범은 고사하고 인간성 비슷한 것마저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파산, 아니 파탄을 뜻한다. ‘시장’이란 본래 그 순수한 역할만을 보자면 그런 곳이다. 살벌하고 각박하고 냉혹한 곳이다. 오직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곳으로 인간의 인간다운 삶 따위는 들어설 곳이 없는 곳이다. 상업을 최하위에 두는 사(士)-농(農)-공(工)-상(商)의 신분 구별은 신자유주의와는 상관없던 시기에도 이미 시장의 비인간적 속성을 간파(看破)한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통찰력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시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장의 원리를 인간의 공동체적 삶의 전 영역에 확장, 적용시키려는 ‘시장주의’에 있다. 시장주의는 온갖 유무형의 사물을 상품화시키고, 그리하여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 한다. 과도한 시장주의 아래서는 노동도 의술도, 지식이나 지혜도 상품이 되며, 심지어는 사람의 몸과 마음도 값이 매겨져 상품이 된다. 학교에서의 교수-학습도, 가정에서 가족 간의 조력이나 애정도 금전으로 환전될 수 있고, 나아가 정치적인 결정도 금전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장에 편입될 수 없는 영역까지도 부당히 시장에 편입시켜, 인인애가 원리가 되는 인

간관계나 평등한 자유가 원리가 되는 정치적 관계까지도 시장의 상품교환 관계로 치환될 수 있다.

경제학자 이정전 교수는 공동체적 삶의 영역을 사회화 영역, 경제영역, 정치영역으로 나누고, 시장의 원리가 사회화 영역이나 정치 영역에까지 지배하게 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²⁾. 사회화 영역이란 가정, 학교, 이웃 같은 인간적 일상생활의 영역이다. 퇴니스가 말하는 ‘공동사회’(Gemeinschaft)나 하버마스가 말하는 ‘생활세계’(Lebenswelt)가 그것이다. 정치영역이란 각 개인의 시민권 행사와 관련되거나 각 개인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가리킨다. 성과나 능력에 따라 사람을 대우하는 성과주의 내지 능력주의가 정의의 원칙이 되는 것은 경제영역에 국한되어야 한다. 생활세계에서는 필요의 원칙 또는 약자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정의로우며, 정치영역에서는 평등이 정의의 원칙으로 서야 한다. ‘시장의 원리’를 모든 영역에 확장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주의’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개인적인 생활세계를 황폐하게 하고, 공동체 전체의 통합과 유대를 위태롭게 한다. 모든 인간관계를 욕구충족 가능성에 관한 타산적인 교환의 원칙에 내맡겨져서는 인의도, 규범도, 인간적 가치도, 이상의 실현도 헛된 망상으로 머물고 만다.

한국사회에서도 인문적 소양이 조롱당하고 인간적 가치가 망각되고 인문학이 냉대받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시장주의’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노골적으로 말해 보자면, “모든 게 돈으로 환산되는 시장 바다에서 돈 안 되는 것은 내다버리는 게 상책”이라는 천박한 통념이 인간과 인간적 가치와 인문적 소양과 인문학 연구를 모두 싸잡아 쓰레기 취급 하고 있다는 말이다.

3. 인문학 내부의 자기소외: ‘인문과학’의 이념

인문학을 무력화시키는 요인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문학 내부에 있는 요인이 외부의 악조건을 더욱 부추겼다고 볼 수도 있다. 인문학을 생활세계로부터 독립시켜 독자적인 과학/학문으로 구축하려는 지적 작업을 이끈 ‘인문과학’의 이념이 그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대다수 인문학 교수들이 ‘전공 인문학 교육’과 ‘교양 인문교육’을 확연히 구분하고 후자를 소홀

2) 이정전,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한길사 2002 341쪽 이하 참조

히 하는 것은 인문학의 각 영역이 갖는 학문적 전문성 및 이론적 독자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은 현대에 들어와 인문학이 인문교육이라는 실천연관을 이탈하여 자립적인 ‘과학/학문’의 길로 나아간 것은 인문학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근본적인 원인(遠因)이다. 말하자면 인문학의 자기소외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실증과학의 이론적 자립성이 지적 탐구 활동 일반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 근대 이후, 인문학도 이 근대학문의 기준에 맞춰 ‘이론화’의 길을 감으로써 인문교육이라는 그 본래의 과제를 많은 부분에서 외면했던 것이다. 합리적 지식과 구별되는 인문적 지혜는 한 공동체를 존립시키는 문화적 역사적 조건들인 에토스에 의존되어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학문적 전문성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다. 본래 고전시대의 인문학은 구체적인 인문교육과 연결되어 있었지, 이론적 독자성을 갖는 학적 체계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실증과학의 영향 아래 인간의 삶에서 합리적 탐구 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성찰의 대상으로 봄으로써, 인문학적 성찰의 본래적 주제인 인간 자체를 상실하게 된 점은 인문학이 결정적으로 자신을 소외시킨 결과가 되었다.³⁾ 인간의 정신적 활동 중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행동의 주체적 요소가 실증과학적 탐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탐구의 시야에서 물러간다면, 인간의 고유한 인간다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성찰하는 인문학은 그 주제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적 이론 체계로서 인문교육과 유리된 독자적 ‘과학’을 자임함으로써 인문학은 스스로 그 존립 의의를 버리는 바보짓을 해 온 셈이다.⁴⁾

4. 인문학적 성찰의 불후(不朽) 의의

“과학은 사유하지 않는다”.⁵⁾ 과학은 사물을 계량, 분석하고 그 현상의 근거를 밝히며 원인을 설명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전제가 되는 ‘이해지평’, ‘해석지평’인 ‘존재의 의미’ 자체에 대해 ‘성찰’하지는 않는다.

3) 실증과학의 대전제인 물질주의적 기계론적 자연관은 암암리에 인간관의 변화를 불러왔는데, 과학적 인 물질주의적인 인간관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 새로운 근대적 전통을 물려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물리주의’(physicalism)가 주도하는 현대 심리철학의 흐름이다. 이러한 3인칭 과학으로 어찌 1인칭 주체성이 핵심이 되는 인간정신을 구명해 낼 수 있겠는가?

4) 대학에서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인문과학’이라는 용어가 ‘Geisteswissenschaft’, ‘Kulturwissenschaft’, ‘Human- wissenschaft’(독), ‘sciences humaines’(불) 등의 용어에 대한 축자적(逐字的) 역어라면 이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5) 1951~52의 강의 <Was heißt Denken?>, 하이데거 전집 8권 수록.

과학은 삶 전체의 목적적 의미연관을 성찰하지는 않고, 다만 그런 의미연관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봉사할 수단을 찾기 위한 작업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삶 전체의 목적적 의미연관, 즉 인간의 삶의 조건, 인간다움의 본질, 인간의 본성과 숙명, 이상적 인간상, 인간적 가치, 인간다운 삶의 정체, 인간적 삶의 의의 및 목적, 행동의 규범, 인간의 이상, 인간의 한계 등에 대한 성찰을 인문학은 수행한다. 인문학은 과학과 이렇게 다르다. 과학이 몰가치적(沒價值的), 중립적, 객관적 관점을 취하는 ‘3인칭 학문’ 이라면, 인문학은 가치개입적(價値介入的), 주체적, 실천적 관점에 서는 ‘1인칭 학문’ 이라 하겠다.

일상의 현실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 자주 묻지 않는다. 난관에 봉착하거나 크게 좌절하지 않는 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수단의 강구에만 열중한다. 그러나 현실의 토대가 바뀌거나, 현실의 구조가 변화할 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인문학적인 물음은 절실해진다. ‘문명의 전환기’ 를 맞는 21세기의 초입, 우리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오늘의 한국인에게 인문학적인 물음은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에 더욱 더 절실하다. 한국의 인문학은 바로 이 위기의 문제상황 속에서 희망을 본다.

- 1) 한국인은 전근대와 근대와 탈현대가 공존하는 복합적 시대상을 소화해 내느라 문화사적 복통을 앓고 있다.
- 2) 한국인은 동서 문명의 충돌이 빚어낸 가치관의 괴리(乖離) 증상을 아직도 봉합-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 3) 한국인은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민족 정체성 문제와 얽혀 특이한 독성을 품고 있는 남북문제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
- 4) 한국인은 준비되지 않은 IT산업의 선두주자로 정보화-세계화로 인한 문명사적 전환을 당황스럽게, 그러나 불가피하게 서둘러 맞고 있다.

한국인이 인문학적 물음을 회피한다면 그 이유는 인문학적 물음이 동반하는 고통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느끼기 싫어하거나 느끼지 못할 만큼 마비증상이 심해졌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인문학의 위기는 바로 거기에 있다.

5. 인문학 르네상스의 기반(基盤), 인문교육

산업화를 주축으로 하는 근대화를 집중적으로 추구할 뿐 여타의 문제들은 외면하거나 유보해왔던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인들이 추구해 왔던 수단적 가치의 증대라는 이념은 과학적 탐구를 존중하고 인문학적 성찰을 경멸하는 풍조를 강화시켜 왔는데, 이는 교육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 결과, 인문학적 성찰을 소홀히 하는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가 때늦게나마 등장한 인문학적 각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 제도적 관성 때문에 변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인문학이 존중받고 진흥되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인문교육과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

인문학이 문제삼는 인간은 그저 객관적으로 관찰 기술되는 대상적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스스로 행위의 주체이므로, 인문학은 주체연관적이다. 인문학은 또 실천적 행위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평가적 내용을 담는다는 점에서 가치지향적이다. 인문학의 이러한 특성은 물론 지성의 자기반성을 전제로 한다.⁶⁾ 자기반성을 토대로 한 주체연관적 가치지향적 탐구가 그 내용의 실현과 무관하다면, 이는 자가당착이다. 한 마디로 말해, ‘인간다운 삶에 대한 탐구’가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자기부정의 공허한 이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문학은 인문교육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아니 본래 동근원적(同根源的)이다. 사실 그 본원을 보자면, 인문학은 인문교육에서 유래한다. 인간으로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적 보편가치의 실현을 도와주는 ‘인문교육’을 위해 그 인간적 보편가치의 내용을 탐구하고자 한 것이 곧 인문학이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할 실천적 능력을 길러주는 인문교육을 위해 탐구하는 것이며, 인문교육은 이러한 인문학적 탐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교회의 지도자인 성직자 양성을 목표로 한 서구에서든, 국정을 담당할 공직자 양성을 목표로 한 동아시아에서든, 동서를 막론하고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후대의 젊은이를 지성과 덕성을 갖춘 성숙한 인격체로 육성하여 공동체와 세계를 이끌어가도록 책임지우는 것이 교육의 근본 목표였고, 인문학적 탐구는 바로 이런 인문교육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점은 근대적 의미의 실증과학이 발달하지 아니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6) 줄고, 인문학의 변질, <인문과학>(서울시립대학교) 10권 1호, 2003 154이하 참조

더 두드러져 보이는데, 시(詩), 서(書), 예(禮), 악(樂)을 중심으로 한 고등 교육과정에서 학문탐구와 인격도야가 항상 융합 겸전(兼全)되어 있었던 점이 그것이다. 즉 교육은 곧 인문교육을 가리키다시피 했고, 이 인문교육의 이념은 모든 인문학적 탐구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학문과 교육의 최고 전당이었던 성균관에서 그 중심 교육과정을 사서오경(四書五經)의 강독 및 해설, 토론으로 구성했던 것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⁷⁾

교육과 관련지어 볼 때, 과학 탐구는 과학교육과 분리될 수 있으나 인문학 탐구는 인문교육과 불가분적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과학적 탐구는 그 분석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전문적 분과적이고 따라서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지만, 인문학은 그 탐구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삶의 의미연관 전체가 더 광범하게 시야에 들어오고 더 보편적인 가치 지평이 열린다. 그래서 그 탐구 성과는 더 고양되고 심화된 ‘일반교육’ (general education)으로서의 인문교육에 영양원(營養源)으로서 기여한다.

6. 인문학과 인문교육의 유리(遊離), 그 배경과 현실

외적으로는 산업화 과정에서 수단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과학에 압도당하고, 내적으로는 실천적인 인문교육과 유리되는 이론화와 과학화의 길을 가면서 인문학은 본래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왔는데, 이를 구조화시킨 것이 현행의 교육과정과 교육구조이다.

어느 대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체로 인문학 분야의 전공(학과)들에서는 소위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을 확연히 구분하고, 후자보다는 전자에, 즉 ‘인문교양교육’보다는 ‘전공 인문학교육’에 더 훨씬 큰 관심을 갖고 열중하고 있다. 전자는 전문적으로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공학도를 가르치며 지도하는 일이고, 후자는 인문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대다수의 학생들로 하여금 일반적 교양의 핵심으로서 인간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통찰과 안목을 갖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고 보니 현실적으로 대학은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인문교육’을 수행하는 ‘교양교육’으로서의 ‘인문교육’은 소홀히 하고, 전문 인문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공교육’으로서의 ‘인문학 교육’만을 중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대학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7) 장재천, 조선조 성균관교육과 유생문화, 아세아문화사 2000, 146이하 참조

그러나 실제적인 교육수요의 측면에서 보면 인문교양교육에 대한 수요가 인문학 전공교육에 대한 수요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문교육은 전자에서 수행된다고 본다. 인문학 분야에서 인문학 전공교육을 받고 이어 대학원에 진학해 전문적인 인문학자의 길을 가려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문교양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실용적인 직업관련 교육을 받고자 원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문교육’, 즉 과학의 모델을 좇아 전문적으로 이론화된 ‘인문학’ 교육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다움에 관한 성찰로서의 ‘일반교육’ (general education)인 인문교육은 바로 이 영역에서 수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대학의 인문학 분야에서 교육과정을 두 가지로 확연히 구별하여 시행하는 데 있다. 실은 대학의 학사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이 두 가지 학업의 길이 하나로 수렴,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가로막고 있는 통념이 있는데, ‘교양교육’은 상식적이고 피상적인, 학술적으로 수준 낮은, 입문적인 내용을 다루면 된다는 편견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양자를 현행 교육과정에서처럼 철저히 구분하는 한, 본래적인 인문교육의 이념도 구현되지 않고, 인문학 연구를 매개로 한 인문학 전공교육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한편으로, 전공과목 수강생이라 해도 소수의 학문지향적인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그 과목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므로 학업상의 부적절성 내지 낭비가 문제된다. 내면적인 지적 요구나 개성적인 성향이 요인이 되어 자발적으로 인문학 전공을 택했다기보다는 대학 진학이라는 단순한 목적 때문에 성적에 따라 원치 않는 학문을 전공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체로 최소한의 전공과목 이수로 인문학 전공 학업을 떠나며, 실질적으로는 다른 실용학문 강좌를 수강하여 외적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한다. 사실 이들이 모두 전공학업에 적극적인 열의를 보여 장차 전문적으로 학문 탐구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 해도,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공교육으로서의 전문적 인문학 교육은, 아니 인문학 연구는, 대학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다른 한편, 인문교양과목들은 많은 경우 전임 중진 교수들의 기피로 인해 학문적 성숙이 미흡한 젊은 강사들이 담당하게 되어 인문교육의 본래 이념에 충실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은 이 인문교양과목이야말로 심도 있고 광범한 학문적 탐구 끝에 얻어지는 성과를 교육내용으로 해

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수준 낮은 초보적인 내용으로는 그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교육과정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그리하여 인문교양교육이 지금의 전공 인문학교육처럼 수준 높은 것이 된다면, 심도 깊은 인문학 연구가 인문교육의 심화로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명실상부한 인문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그 확장된 교육영역만큼 인문학 연구에 대한 수요도 확장될 것이다. 현행처럼 집토끼도 산토끼도 모두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일석이조(一石二鳥), 일거양득(一舉兩得)이 될 것이다.⁸⁾

대다수 인문학 교수들이 전공 인문학 교육과 인문교양교육을 확연히 구분하고 후자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인문학의 각 영역이 갖는 학문적 전문성 및 이론적 독자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은 현대에 들어와 인문학이 인문교육이라는 실천연관을 이탈하여 자립적인 ‘과학’의 길로 나아간 것은 인문학의 위기를 자초한 근본적인 원인(遠因)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인문학의 자기소외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실증과학의 이론적 자립성이 지적 탐구 활동 일반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 근대 이후, 인문학도 이 근대학문의 규준에 맞춰 ‘이론화’의 길을 감으로써 인문교육이라는 그 본래의 과제를 많은 부분에서 외면했던 것이다. 합리적 지식과 구별되는 인륜적 지혜는 한 공동체를 존립시키는 문화적 역사적 조건들인 에토스에 의존되어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학문적 전문성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다. 본래 고전시대의 인문학은 구체적인 인문교육과 연결되어 있었지, 이론적 독자성을 갖는 학적 체계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실증과학의 영향 아래 인간의 삶에서 합리적 탐구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성찰의 대상으로 봄으로써 인문학적 성찰의 본래적 주제인 인간 자체를 상실하게 된 점도 인문학이 자신을 소외시킨 결과가 되었다.⁹⁾ 인간의 정신적 활동 중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행동의 주체적 요소가 실증과학적 탐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탐구의 시야에서 물러간다면, 인간의 고유한 인간다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성찰하는 인문학은 그 주제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8) 줄고,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균형과 수렴에 관해」, 교양교육연구 4권 2호(2010) 참조

9) 실증과학의 대제인 물질주의적 기계론적 자연관은 암암리에 인간관의 변화를 불러왔는데, 과학적인 물질주의적인 인간관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 새로운 근대적 전통을 물려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물리주의’(physicalism)가 주도하는 현대 심리철학의 흐름이다.

전문적 이론 체계로서 인문교육과 유리된 독자적 ‘과학’을 자임한다면, 인문학은 스스로 그 존립 의의를 버리는 바보짓을 하는 셈이다.¹⁰⁾

7. 인문학과 인문교육의 재결합, 교육구조와 교육과정의 변혁

산업화라는 외부환경과 과학화라는 내부사정으로 인해 크게 왜곡된 인문학과 인문교육의 동원성(同源性)에 대해 각성한 바가 있다면, 이 양자를 다시 연계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첫 걸음은 앞서 말한 대로 **인문학 분야 교육과정에서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차별을 없앴**으로써 전공 인문학교육과 인문교양교육을 통합하는 일이다. 소수의 학생을 위해 특정 인문학 전공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일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몇몇 대학에서는 특정 학과를 폐과시키기도 한다. 만일 인문학 전공교육과정과 인문교양교육과정이 하나의 교육과정 안에 통합되어 운영된다면, 극단적인 예로, 그 특정 전공을 전공하려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에라도 다수의 학생들에게 그 인문교양교육을 실시할 과제와 기회는 여전히 상존하므로, 그 전공 교육과정은 그대로 운영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앞서 말한 ‘교양교육’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대학에서 교양교육이란 전공교육에 비해 볼 때 “하면 좋지 만, 아니 해도 무방한 여분의 교육”이라는 피상적 편견은 버려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양교육은 전공교육과 나란히 대학교육의 한 축(軸)을 이루는 것으로 그 학문적 깊이와 성과가 오히려 전공교육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 교양교육의 내용은 학문적 깊이가 있으면서도 새로운 문화적 현실에 부응할 수 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쇄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 내용을 교과목으로 빚어내는 교육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¹¹⁾

10) 대학에서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인문과학’이라는 용어가 ‘Geisteswissenschaft’, ‘Kulturwissenschaft’, ‘Humanwissenschaft’(독), ‘sciences humaines’(불) 등의 용어에 대한 축자적(逐字的) 역어라면 이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11) 좀 더 구체적으로 강좌운영을 생각해 보자: 먼저 인문학 분야의 해당 전공 교과목들을 전공과 교양으로 구분하는 대신 그 이론적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구분하여 전공학생에게나 비전공 학생에게나 차별 없이 수강토록 허용한다. 해당 학문을 전공할 생각이 전혀 없는 학생들에게도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정련된 강의 내용을 초급강좌로 개발한다. 교과목을 초, 중, 고급 단계로 구분할 때 척도가 되는 것은 이론화의 수준이다. 즉 구체적인 현실의 체험내용이나 그에 대한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작업은 **교육구조의 개혁**에 있다. 인문학 분야는 직업적 전망이 밝은 학문분야가 아니다. 대학교육의 의의를 직업교육에서 찾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인문학 학업은 무망한 일이다. 그러나 직업교육 자체를 위해서도 인문교육이 필요하고 인문학의 연구와 교육은 그 자체로 대학의 사명이므로 이를 방기(放棄)할 수는 없다. 균형 잡힌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실과 이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폭넓은 안목을 갖추어주기 위해서는 인문학 분야의 학업을 수행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명실상부한 ‘학부’ 나 ‘학부대학’ 을 설치**해 학생이 특정 전공 학과에 ‘갇히지 않고’ 여러 학문분야의 학업을 자유롭게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사회에서는 지식, 기술, 산업 등이 모두 분화, 전문화보다는 융합, 종합화의 경향을 보인다. 오늘의 문화사회적 상황은 여러 문제영역들이 각기 분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계,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사회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지적 능력도 어느 한 분야에서의 지식습득만으로는 함양되기 어렵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총체적 맥락 속에서 한꺼번에 다가오므로 문제해결의 방식도 종합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문제해결의 능력도 융합적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인간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성찰을 내용으로 하는 인문학적 소양이야말로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을 통해 이를 함양하는 일은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이다.

사실과학적 서술 등이 차지하는 부분과 추상적인 이론에 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초급 강좌에서는 이론이 전면에서 등장하지 않고 현실의 체험, 기술(記述), 진단, 비평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다가, 학기말쯤에 가서야 검토된 현실에 어떤 인문학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 이론들을 약간 소개하는 정도로 그친다. 물론 중급 강좌를 거쳐 고급 강좌에 이르면, 거기서는 인문학적 이론들 간의 논쟁들이 주제적으로 다루어지고 이 논쟁에 대해 수강생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견해를 가져보도록 유도된다.

초급 강좌를 통해 현실 속에서 인문학적 문제를 찾아내는 감각과 능력을 보이며 그런 학업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학생은 자연스럽게 그 인문학을 전공하려 할 것이다. 이런 학생들은 다수는 아니겠지만 점차 ‘학문후속세대’로 성장할 사람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 인문학을 전공으로 택하지 않는 학생이라도 어차피 ‘교양과목’ 이수 규정에 따라 초급 강좌를 수강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인문학적 성찰의 의의를 깨닫고 인문학적 탐구의 가치를 수긍하게 된다면, 그 강좌는 ‘인문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끈 강좌일 것이다.

해당 인문학 강좌 중 (주로 초급강좌가 되겠지만) 이러한 강좌군이 형성되면 이 강좌들은 자연스럽게 전공과목이자 동시에 교양과목으로 역할을 다하는 이른바 교양-전공 겸용과목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요, 이들을 전공과 교양 양 영역에서 ‘중복 설강’(Double Listing)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전공 교육과정과 교양교육과정의 전적인 통합을 준비하는 이러한 예비 단계가 성과를 거두고 해당 전공분야 교수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양 교육과정의 통합은 점차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적 숙성도가 아직 낮은 젊은 강사에게 이런 강좌를 맡기는 관행을 깨야 한다. 고정된 ‘교과과정표’에서도 과감히 탈피하여 교수든 강사든 자신 있게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의 강좌를 탄력적으로 개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문학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특정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확보하여 ‘학과’를 유지하려는 기획보다 보다 광범한 영역의 학생들에게, 나아가 전교생에게 인문학 강좌를 제공하려는 기획이 앞서 말한 이유 때문에 더 성공적일 것이라 본다.¹²⁾

현실을 감안하여 차선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의 의무 이수제**이다. 내용인즉, 직업적 전망이 밝은 응용학문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등 기초 순수학문을 제 2의 전공으로 혹은 부전공으로 공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 이유 및 성과는 앞서 말한 바대로다.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제도가 추구하는 바와 유사한 교육적 의도로 추진하되, 특정 의도를 갖고 특정방향으로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을 새로이 구성해보고자 할 때 속칭 **‘연계전공’**이라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가 있다. 이는 몇몇 전공 분야의 과목들을 선정하여 이들을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함으로써 일종의 복합학문적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복합학문적 교육과정이 어떤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도 인문학은 그 본성상 필수적인 과목들을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전공 제도도 인문학 연구와 인문교육을 위해 바람직한 기획이라 하겠다. 관건은 역시 이를 전담하는 교수진이 확보되어 열성적으로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교육내용을 개척하는데 있다.

이상의 방책들이 공히 전제로 하는 것은 **교육구조의 ‘성충화’**이다. 기초학문분야, 특히 인문학 분야의 학업과 다른 응용학문분야의 학업을 평면 위에 병치해 놓고 선택하도록 하는 현행의 ‘학과제’에서는 교육구조가 획일화된 단층구조이다. 직업지향성이 강한 응용학문 분야의 학업은 반드시 기초학문 분야의 학업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이루어지도록 학업을 ‘성충화’시키기 위해 교육구조도 성충화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인문학만이 아니라 기초 사회과학 및 기초 자연과학의 분야도 사정은 비슷하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 기초학문분야 전체를 싸안는 (학부대학, 또는 구 문리과대학과 같은) 교육기구를 설립하여 이 기구로 하여금 전교생을 상대로 강화되고 심화된 교양교육을 담당케 하는 교육구조의 정착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 기구에는 기초학문분야의 각 학과가 존립하되 거기엔 교수진이 소속되어 있을 뿐, 학생이 소속되어 있지는 않다. 이 기구에 속하는 학생

12) 학부제, 학부대학에 관해서는 줄고, 「새로운 교육수요와 교양기초교육」, 교양교육연구 1권 1호(2007), 「융복합 교육의 기초와 학부대학의 역할」, 교양교육연구 3권1호(2009) 참조

은 하나의 학과에 “전속” 되어 하나의 전공 학업만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학문(학과)을 가로질러 다니며” 공부를 함으로써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안목을 갖게 되는 학업을 수행한다. 물론 이 기구의 밖에 있는 응용 학문분야에서 전공학업을 수행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기구에서 제공하는 교양과목을 일정량 수강하고, 나아가 이 기초학문분야에서 한 가지 이상의 학문을 부전공으로 혹은 제 2의 전공으로(복수전공) 선택해 공부하게 함으로써, 온전한 학업을 하게 한다.

한국의 대학 교육에서 한편으로는 인문학의 발전을 가로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교육의 심화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특유한 학사구조가 있는데, ‘사범대학’이 바로 그것이다.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출발한 사범대학은 정부 수립 후, 그리고 한국전쟁 후, 국민교육의 공백을 메워 주는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산업화가 어느 수준 달성되고 교육 기구가 정비된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한국 교육의 도약을 위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교육기관이 되었다.

사범대학은 학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고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므로 학문적 탐구는 그 일의적인 과제가 아니다. (사범대학에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것도 원론적으로 숙고해보면, 자가당착이다. 우수한 사범대학 졸업자가 교사로 나가지 않고 대학원 졸업 후 교수가 되는 것은 사범대 설립의 이념에 비추어볼 때 낡은 센스다.) 교사 양성 학사과정에서는 학문적 탐구가 요구되지 않는다. 실제로 학생들은 임용고사라는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열심히 하여 교사가 된다. 기능적 지식의 전수를 담당하는 교과에서는 몰라도 인문학 분야의 교과에서는 이러한 학업만으로는 교사로서 인문교육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¹³⁾ 학생들이 청소년기를 보내는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인문교육이 특히 더 중요할 텐데 교과 교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는 이 인문교육이 인문학적 탐구를 심화시킬 기회가 없었던 교사들에게 맡겨짐으로써 중등 인문교육의 수준을 고양시키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좀 더 시야를 넓혀 보면, 이공계 학문분야가 산업계와 연계되듯이, 인문학 분야는 사회의 문화적 지형에 비추어 볼 때 중등 교육계와 연계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체적으로 말해, 인문학 분야에서 학문적 탐구에 종사하고자 하는 후속세대가 중등교육에서 인문교육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

13) 사범대학에서도 (인문학 분야에서) 인문학적 탐구가 교육의 중심이 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곧 사범대학이 인문대학과 교육과정상 다를 바가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인문학 분야만큼은) 인문대학과 별도로 사범대학이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인문학 연구와 중등교육에서의 인문교육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연계되면, 한편으로는 인문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를 널리 확보함으로써 인문학의 진흥에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학 연구의 성과가 영양원으로 공급됨으로써 중등교육의 인문교육이 수준 높은 것으로 심화될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인문학 진흥을 위해, 중등 인성교육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기울이는 그 어떤 행재정적 노력보다도 이 방향이 더 큰 결실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방향은 교사양성을 전담하고 있는 사범대학 제도가 엄존하는 한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 (끝)

인문학의 공공성-현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태승

(아주대학교 교수)

문제의 소재

“인문학교수들은 스스로를 구제할 힘을 이미 잃어버렸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프랭크 도나휴, 2008.)

20세기 말 이후 인문학 위기론이 대학을 지배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재직 중인 인문학 교수들에게 위기는 여전히 상존하는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문학 위기에 대한 기존의 담론들은 대부분 거대논리에 함몰되어있으며, 주로 외부의 공격에 대한 대응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인문학은 전공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각 전공은 이 위기의 대응을 통해서 자신의 전통적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디지털 인문학” 등으로 대표되는 응용인문학의 등장 속에서 인문학은 내부에서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전공의 정체성을 중시하는 (필자는 그것을 ‘학과인문학’이라 말한다) 논의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시장과 국가의 과도한 대학교육 개입에 의해 “폐허 속의 대학”으로까지 묘사되는 현실 속에서 대학에 재직 중인 각각의 인문학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좌절감을 느끼는데,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인문학 위기라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데 장애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한 좌절감이 학과 인문학적 관점에 서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학 인문학 위기의 수준은 한국적 상황에서는 거대담론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여러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주요 역할로 생각하는 대학과 시민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하는 대학, 규모가 큰 대학과 작은 대학,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들 사이에는 위기에 대한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대학의 인문학 교수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미시적이면서도 거시적인 논의를 통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접근 경로로 ‘공공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인문학의 공공성 혹은 인문학자의 공공성

대부분의 인문학자들은 자신이 “공적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를 떠맡은 사람”이라는 수준에서 공공성을 체현하고 있다고 생각함으로 공공성에 대해 그다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를 공적 지식인이라 여기는 교수들은 (대부분) 대학 바깥 사회와의 소통문제를 자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학 안에서 지식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Stanley Fish, 1995)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다.

사실 대학의 인문학자들은, 보통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대학원에서 하고, 학위를 취득한 뒤에는 대학에서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가르치면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일생을 보낸다. 이 과정은 실제로는 인문학자들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과정이다. 심지어 교육영역에서조차 많은 교수들은 자신이 관심있거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가르친다. 학생들이나 사회변화가 그러한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매우 제한된 개별적 형태로 나타날 뿐 상당수의 교수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공성은 구체적 현실과 분리된 거시적 차원에서 인문학 교수들의 자기위로의 수사학으로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이다.

그래서 상당수의 대학에서 인문학 교육은 교수들의 관점에 의해 표준화된 형식으로 작동한다.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는 대학이나 사실상 시민교육을 수행해야 할 대학이나 모두 비슷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인문학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전문학자의 길을 걷기 보다는

건강한 생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현실은 진지한 고려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교수들이 이러한 교수중심의 사적 판단을 공공성의 외양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역할도 영향을 끼쳤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연봉제의 도입과 교수업적평가 체제, 대학평가 등이 계량화하기 쉬운 연구업적 평가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는 사실상 개별교수업적으로 평가하는 이러한 각종 평가제도는 교수들을 더욱 더 파편화시켰고, 교수들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후퇴시키게 만들었다.¹⁾ 대학원이 활성화되어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교수 수가 적어 각종 대학업무에 교수들이 총동원되는 대학이나 공동 작업을 조직화할 수 있는 수준의 대규모 교수집단을 확보한 대학, 최소한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의 학과운영규모를 가진 대학이나 풍부한 재정기반을 가진 대학들을, 모두 동일한 척도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평가하는 형태는 현존하는 위기를 개인의 생존문제로 바꾸어놓는 결과를 낳았고, 공적 지식인으로서의 자각은 현실적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상당수의 교수들은 개인연구에 집중하거나 사적 생활공간으로 후퇴하게 되었고 대학운명을 포함한 공적업무에서 ‘진지한’ 교수들을 참여시키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고, 불만을 토로하지만(공개적 토론이 없으므로 그 불만이 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 객관화하기 쉽지 않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실천에는 소극적인 문화가 교수들을 지배하게 되었다.²⁾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열정을 바치는 교수들의 (개인연구와 담당 교과목의 불일치 등 교육개선을 위한 새로운 형식개발노력 등) 진지한 노력도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학회의 창설을 통해서 연구와 교육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고, 그것은 새로운 학술지의 창간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예컨대 교양교육관련 학회지, 문화콘텐츠 관련 학회지 등). 그러나 새로운 학술지의 간행이 반드시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 각종 평가제도는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연구의 질적 문제를 ‘돈’의 문제로 바꾸어 놓는 탈맥락적, 프레임바꾸기형 기획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관점이 가능하게 된 데는 교수집단의 윤리성 문제(‘철밥통’ 등으로 비하되는 공격)가 놓여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2) 프랑스의 경우도 비슷. “사실상 대학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보다는, 대학과 교직원들이 상위목표를 따라 움직이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율성과 혁신력 증진과는 완전히 모순된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해석. 엑스마르세유 대학의 역사학 교수의 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6.09.

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 통계자료에 의하면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은 67,499명인데, 현재 한국 연구재단에 의하면 학술지(등재, 등재후보 포함)는 2,299개로 나타나 있다. 학술지 하나 당 회원수 29.4명 정도이다. 인문학으로만 한정하면 인문학 학술지 수는 559개(등재 507, 등재후보 52. 같은 자료)인데, 학과 수는 1,580개로 학과 기준으로는 3.5개 학과 당 1개의 학술지가 발행되고 있는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철학은 70개학과가 개설되어있는데 학술지는 44개이고 역사는 91개 학과(미술사 등을 포함하면 168개)가 개설되어있는데 학술지는 99개이다(이상 등재, 등재후보 만).

이러한 학술지의 증가는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학회/연구자들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해석될 수도 있겠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연구실적 위주의 평가가 가져 온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보여 진다. 학술지의 과도한 증가와 그로 인해 파생된 논문획득을 위한 학술지 간의 경쟁은 연구의 질 보다는 양적팽창을 중시하는 현실과 맞물려서 인문학에 대한 내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인문학계의 진지한 토론이 이루진 바 없고, 학술지 지원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과정에서 등장한 인문학계의 대응도 기본적으로는 인문학의 공공성과 그 내부의 문제에 대한 진솔한 성찰의 결과인지 의문스러웠다. 연구영역에서조차 “공적 지식인 ‘으로서의 인문학자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대학의 내외를 막론하고 ” 공적 지식인으로서의 교수 “ 보다는 ” 직업인으로서의 교수 “가 보다 일반적 현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2. 인문학의 공공성에 대한 내외의 도전-교수 학생관계를 중심으로

대학에 재직 중인 인문학자들에 도전은 우선을 학생들로부터 나타났다. 교수들은 대부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연구활동에서 찾는다. 그래서 연구가 교육을 제약하고, 교수의 지위를 결정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한 전문언론(대학교육신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생들이 대학에 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대학생들의 대학 진학 이유]

항목	2013(%)	2006(%)
취업의 유리한 조건 획득	44.8	40.2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	18.8	19.4
다양한 경험 가능	15.5	9.0
학문연구	13.0	11.3
부모의 권유	2.5	4.3
신분 상승 기회 확보	2.4	5.4
기타	1.2	1.2
인간관계 확대	0.8	5.4
배우자 선택을 위한 좋은 조건 획득	0.8	3.7
합계	100.0	100

위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학생들이 대학을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취업 등이다. 교수들이 개인적인 관점에서 연구에 집중한다면, 학생들은 그들의 사적 이해의 관점에서 대학교육을 바라본다. 그것은 대학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에도 나타나 있다. 2006년 자료에 의하면 학문연구는 12.3%이고 고급인력배출은 38.3%, 사회비판 및 방향 제시는 14.3%로 나타나 있다. 미국도 아래 표에 나타나 있듯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미국 대학생의 대학진학 이유(20개 중)]

항목(상위 3개)	1971	항목	2001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68.5	부자가 되기 위해서	73.0(71년 5위)
한 분야의 권위자가 되기 위해	66.0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61.5
정치 현실을 잘 이해하기 위해	57.8	정치현실을 잘 이해하기 위해	28.1

미국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등록금 부담의 증가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 연구자는 지적하고 있다. “대학교육이 책임있는 시민을 양성한다는 인문학자들의 단골주장”은 더 이상 현실적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되었다.(도나휴, 2008. p.201) 한국에서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황은 비슷했다. 논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인문학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검토되어야만 하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대학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교수들과는 다른 견해를 보여준다. 강의의 질적 향상과 장학혜택, 학생 서비스 개선 등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표3 한국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학이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항목	2013(%)	2006(%)
강의의 질적 향상	40.6	33.2
장학혜택 확대	18.3	12.3
학생 서비스 개선	11.8	7.7
우수교원 확보	8.5	9.9
문화공간 확대	6.1	5.8
연구실 및 실험 기자재 확보	4.9	8.7
의사결정구조 개혁	2.5	2.3
도서관 시설 확충	2.3	4.3
기타	1.9	1.6
지역사회와의 개방	1.6	5.4
연구강화	1.6	8.8
합계	100.0	100.0

고액의 등록금 부담, 일자리의 감소에 따른 미래불안 등의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관심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되었고, 대학교육에서 공공성의 문제는 힘을 갖기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인문학의 공공성의 위기는 내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교수, 학생들의 개별화³⁾, 사적 이해관계의 중시현상으로 현실화되게 된 것이다. 이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그 이유를 알고 있으므로 여기서 재론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당위론적 접근으로는 해소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취업을 원하니까 취업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복지를 원하니까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대중 요법의 방식으로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3) MOOC와 같은 사이버 교육의 확대 역시 개별화현상을 가속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LMS 기업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의 현상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예의 경제논리의 개입확대를 촉진함으로써 힘없는 비정규직 교수 양산 가능성. 또한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교육주체들의 영향력 감퇴 등의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체제는 불가피하게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게 되고, 그 결과 학생들의 파편화 현상 가속화, 교수직무의 전문성 소멸위험 등에도 주의 필요.

3, 공공성의 회복? - 절실함과 무력감의 사이

“우리 학교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교육이 가져다주는 것, 즉 좋은 일자리와 승진이다.” James Traub. 피닉스 대학의 전 총장, 1999.

미국에서 영리대학인 피닉스 대학의 총장이었던 트라우브의 말은 사실상 오늘날 대학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취업중심교육이 정말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었는지 우리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것은 졸업 후 몇 년 이내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나긴 인생을 흐름 전체 속에서만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각종 평가 지표 등에서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표충’의 현실이고, 현실에서 대학행정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문제는 국가와 시장의 요구와 교육/학문의 원칙 사이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긴장을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제한된 재정규모로 인하여 발생하는 최적화 논리에서 인문학은 항상 주변적 지위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각 종 재정지원 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그것을 보충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나, 그것이 해당 대학이 처한 상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조정하는 일이 항상 문제가 되어왔다. 일반 교수들은 당위론적 원칙을 소리 높여 외치지만 구체적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는 서툰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행정적 타협을 통해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그것은 항상 외부의 도전에 대한 반응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변화의 주체로서 인문학 교수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대학체제의 변화를 준비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인문학관련 보직 교수들은 당위론적 절실함과 현실적 무력감 사이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실용주의 교육이론의 개척자였던 존 듀이는 “진정한 의미의 직업은 성취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그 활동을 하는 자신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것으로 만드는 생활 활동” (민주주의와 교육, 1916)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지식교육이 아니라 가치교육인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문학은 생애교육과 관련하여 현실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인문

학 관련 도서, 정보, 미디어 프로그램의 성행은 인문학에 대한 대중적 목마름이 실재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문학 교육이 무엇을 해야 하는 가를 잘 나타내며 교육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드러낸다.

사실 한 미국의 역사교육학자가 ‘문화적 커리큘럼’ 이라고 불렀던 수많은 인문학적 정보의 학교 밖 유통은 한 인간이 학교 교육에서 배운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학교 밖에서 얻게 만들었고 ‘만인을 인문학자’ 로 변화시키는 현상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커리큘럼의 영향력 확대의 결과 인문학적 지식은 ‘과편화된 지식의 자의적 조합’ 으로 변화하면서 탈맥락화된 논리의 유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20세기말 이후 주목되기 시작한 사회적 자본에 관한 학술적 논의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 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도덕적 자원” (Putnam, 1995)이 사회적 자본이고 그런 점에서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인문학 유행은 이러한 도덕적 자원의 측면 보다는 가진 자들의 장식품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인문학 위기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하다.⁴⁾

인문학에 대한 시장의 공격은 하루 이들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아도 그것은 19세기 이래 꾸준히 지속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건강한 시민사회를 성장시켜 온 핵심적 학문으로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 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식생산의 원천으로서의 대학의 권위가 해체되어가는 것도 현실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도달했고, 그 출발은 인문학의 공공성-인문학 교수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공적 지식인’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4. 대안 혹은 제안

가. 교수사회의 자기성찰 : 교육영역의 확장성 확보를 위한 노력, 인문학 교육체제에 대한 학술적 탐구를 통한 미래전망 공유노력(“자기 직업에 대한 사회학자임은 물론 제도 역사가가 되어야 한다.” 프랭크 도나휴, 2008)

4) 거리의 인문학, 사회 인문학, 치료 인문학 등 진지한 교수들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소수 교수들의 활동에 제한되어있고, 교수 사회 자체의 윤리적 책무인식과 분리되어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의미를 갖는다. 대체로 전통인문학의 학문적 속성으로 인하여 인문학자들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 초월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변화에 대해 수동적 태도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주의 할 점은 따라가는 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자신의 가치를 내세우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나. 인문교육체제의 전면적 개편 : 교수집단의 전공별 구성을 전제로 전공을 넘어서는 교육과정의 완전한 공유체제 수립. 소수의 학문후속세대 육성대학과 다수의 자유학예대학으로 인문교육체제 개편에 대한 고민 필요. 현재 분리된 교양교육과 인문학 교육의 통합 필요. 그러한 기반 위에 전공트랙의 다양화 노력 필요.

다.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인문학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 : 교수가 중심이 아니라 교수-학생-사회의 맥락에서 세상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인문학 교육내용

라. 디지털 시대에 대응력 개발필요 : 교육관련 매체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 내용 개발 필요

“현재 고등교육에서는, 실제 캠퍼스에서든 온라인에서든 교수의 일은 개별화하면서(즉 강의 개발과 강의 수행에서 최대한의 융통성을 교수들에게 허용하며), 학생들의 학습 경험은 표준화한다(즉 같은 강좌를 듣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요구, 관심, 능력이 똑같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반대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즉 학생의 학습을 개별화하는 대신 교수의 일을 표준화해야 한다.” Carol Twigg, 2003.

고등교육과 인문학

최진규

(조선대학교 인문대학장, 전국 사립대학 인문대학장 협의회 부회장)

I. 머리말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인문학은 ‘생태계가 고사할지도 모를’ 위기, 경제에 서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취업률, 입학결원(입결) 등의 분위기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위기를 넘어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도 제시되어 왔다. 학과 통폐합, 정원 조정, 타 전공과의 융합, 기초교양 교육 강화 등이 그것이다.

해방 이후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대학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자리잡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이후 50여년에 걸쳐 산업시대 고속 성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였다. 이후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들어선 이후 복합적 능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생 부족과 반값 등록금 요구 등에서 비롯된 대학 경영의 어려움에다 교육 당국의 주기적인 대학 평가를 두고 대학은 강요된 구조조정에 골몰하고 있다. 가장 먼저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인문학 관련 학과들이다. 특히 2015년 후반에 준비되어 2016년 초 선정을 마친 프라임 사업으로 상징되는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문학의 존폐 위기는 절정에 달하였다.

II. 우리나라 대학의 설립과 고등교육의 역할

인문학의 ‘위기’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역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高等教育, Higher Education)은 중등교육

에 이은 최상위 단계의 교육으로서 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수여하는 대학교, 대학원 등의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가리킨다.

주지하듯이 19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되는 서양 산업국가의 제국주의적 팽창은 비서양 국가들을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진입하도록 강제하였다. 전통적인 체제를 오랜 기간 유지해 오던 우리나라는 세상의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였고 20세기 초 급기야 산업화에 한발 앞섰던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후 서양의 근대교육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본은 식민지 주민에 대한 교육을 본국과 차별을 두어, 고등교육을 통한 사회 지도층, 엘리트 양성 교육을 억제하고 전문 기술인 양성에 그치는 교육 정책을 시행하였다. 우리 손으로 대학을 설립하려는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저지한 후 일제가 내세운 것이 경성제국대학 설립안으로 1924년 개교하였다.

본격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4년제 대학은 해방 이후 1946년부터이다. 조선대, 단국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양대, 국민대, 건국대, 홍익대 등 현존하는 여러 사립대학이 이 시기에 설립되었으며, 구한말부터 세워진 전문대학도 4년제 대학으로 발전하였다. 해방과 함께 미군정, 6.25, 4.19, 5.16 등 해방 정국과 분단, 내전,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사회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근대 학제로서의 중등교육과 함께 고등교육 체계가 자리잡으면서 근대 학문의 성과 역시 축적되기 시작하였음은 물론이지만 고등교육의 주된 역할은 여전히 산업 인력의 양성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

20세기 중반에 본격화되는 4년제 대학의 설립과 이후 전개된 급속한 산업화와 개발독재 흐름 속에서 성장제일주의, 수출지향의 산업화 전략, 중화학공업화 전략을 추진한 결과 정경유착, 재벌(Chaebol)의 등장, 노동력 착취, 산업의 지역 편중, 환경파괴 등 다양한 문제를 낳았다. 선진 산업국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정책 기조는 일본이 수십 년 앞서 경험한 산업화의 문제를 더욱 왜곡된 형태로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남북 분단과 냉전체제(아직 종식되지 않음)까지 더해지면서 편향적 이데올로기의 울타리에 갇힌 우리 사회는 거시적·종합적·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에 제약을 받으면서 단기적인 대중 처방만 남발해 온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통문화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파괴는 전통적인 윤리관을 무너뜨리

고 이를 대신할 민주주의 윤리는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였으며, 반만 년 역사 속에서 축적해 온 인문정신 또한 낡고 진부한 것으로 치부되고 그 자리를 시장논리, 신자유주의가 차지하고 말았다. 요즈음 젊은이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헬조선(Hell 朝鮮) 즉 ‘지옥과도 같은 한국’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고등교육의 주요 목표인 ‘종합적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단순 기능인 양성에 치중해 온 결과는 이처럼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여전히 ‘맞춤형’ ‘융복합’ 인재를 내놓으라고 대학에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Ⅲ. 인문학과 대학의 구조조정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위기에 처한 것이 인문학이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각별히 육성·발전시켜야 할 인문학이 이처럼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배경에는 취업이 어렵다는 사정이 자리하고 있다. 대학평가에서 취업률이 낮은 인문학 분야가 점수를 낮춘다는 이유에서 이들 전공을 서둘러 폐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각대학이 인문분야 축소를 골자로 한 구조조정을 단행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까닭이다.

대학의 구조 개편을 이처럼 마구잡이로 단행할 경우 대학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인구 감소를 빌미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이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대학 정책은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적 병폐는 내버려둔 채 기업체 구조조정 식의 축소지향 방식으로 한국의 고등교육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학사구조 선진화라는 이름의 대학구조개혁 시도는 고등교육의 현황을 잘 보여준다. 2015년 후반기에 발표되어 금년 초 선정을 마친 프라임사업의 경우 인문·사회·자연과학 계열의 입학정원을 공학 계열로 이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구조조정 사업이었다. 고용노동부의 인력수급 통계를 근거로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력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 사이의 ‘미스매칭’이 사업 시행 이유였다. 사업 내용에 일부 인문학 진흥 방안이 포함되긴 하였지만 위로부터의 강압적인 구조조정 압력에 대한 반발은

무마하기 위한 임시 처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함께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에 의해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4항) 대학이 교육 목적에 따라 전공과정을 설치하고 자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때 본래의 설립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함께 인문학의 전공 존립을 위협(?)하는 하나의 논의가 바로 융복합이다. 스티브잡스가 기존의 MP3와 카메라, 휴대전화, 컴퓨터라는 ‘점’을 연결하여 ‘아이폰’을 만든 것을 비유하여 언급한 ‘점을 연결하라’는 명제는 융복합 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점’들이 이미 최상의 상태로 발전되어 있을 때 ‘연결’이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어떤 종류의 융·복합이든 그것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등 기초학문과의 융·복합이어야 한다. 하나의 중요한 ‘점’으로써 인문학 육성이 필수 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이 20세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실용학문의 세분화와 새로운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측면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들어서면서 분절된 과학지식이 아닌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인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사회와 기업은 이제 단일 세부 전공을 익힌 인재에서 복수의 종합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스마트 환경으로 변화된 세계에 적응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융·복합’ 인재 양성을 대학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IT 분야의 등장과 지나치게 세분화된 이공학 분야를 두고 보면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오랜 동안 분화되지 않은 채 본래의 영역을 지켜 온 인문학 분야의 전공까지 ‘융·복합’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취업률’ 평가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도 한몫하여 ‘청산’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 일정한 합의에 도달해 있지는 않지만 융·복합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진전되었다. 특히 ‘융·복합’이 가능하려면 각각의 연결하는 ‘점’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하며, 전공을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공을 심화, 발전시키는 가운데 새로운 전공 분야로서 ‘융·복합’을 추진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전공 교과목은 융·복합이 아니라 ‘심화’ ‘발전’ 시켜야 하며, 융·복

합 교과목은 기초교육과정에서나 가능하다는 점. 전공의 융·복합 교육은 연계전공, 다전공, 복수전공 제도로 충분하다는 점. 각 전공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내면에서 ‘융합’ 하면 되며 융·복합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융복합은 새로운 전공을 창출함으로써 전공의 수를 늘리는 전략이며, 대학이 융복합으로 전공 수를 줄이려는 것은 근본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IV. 인문정신과 사회의 요구

21세기 고등교육의 주된 흐름이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여 인문정신을 발현할 수 있는 종합적 인재 양성이란 한다면 특히 인문학은 더욱 심화, 육성되어야 한다. 인문학, 인문전공이 대학 구조조정에서 주 타깃이 되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현실과는 반대로 사회에서는 인문정신, 인문소양의 확산을 요청하고 있다. 융·복합의 방향도 이공학 내부에서의 융·복합에 앞서 인문정신, 인문소양을 바탕으로 한 과학 인재의 양성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하다.

인문정신, 인문소양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고등교육의 목표가 전인교육, 사회 지도층 양성 교육, 엘리트 교육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인문학이라는 ‘점’을 도외시킨 채 인문정신, 인문소양을 교육해내라는 역지를 부리는 격이며 이는 결국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공(점)이 없거나 부실한 상태에서 다른 전공과 융합하라는 요구가 되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성공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우리나라 대학의 전공 특히 공학 부문의 세분화는 근본적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급속한 산업화 시대에 부응하여 늘어난 사정을 이해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의 유수한 대학들이 30여개의 전공을 크게 넘지 않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 대학에는 70여개의 전공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 지나친 감이 있다.

교육 당국이나 사회는 대학에 ‘졸업 후 현장에 투입하면 즉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른바 ‘맞춤형 교육’ ‘맞춤형 인재’에 대한 요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20세기에도 부적절하였지만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더욱 적절하지 않다. 수십만 종류의 직업에 일일이 맞추어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전문기술에 몰입되어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은 기초학문 지식이나 인

문정신, 인문소양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여 기술 발전의 추세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북경대학처럼 자유교양학부를 설립하여 전공위주 교육의 한계로 지적되는 ‘적응력’을 키우고 기술의 급변, 세계화, 융합 문명 시대에 대비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문명이 발전한 시기는 모두 인문정신을 주된 흐름으로 하였다. 고대 희랍과 이집트에 인문정신을 중시한 철학 전통이 있었고, 르네상스(문예부흥)는 인문정신이 구현된 문화운동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산업사회가 전개되면서 과학기술의 이성적 사고가 성행하면서 인문정신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물질만능’ ‘기술만능’에 빠져 ‘성과’를 따지기에 급급하였다. 이러한 시대 배경 아래에서 자각적으로 인문정신을 회복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과 민족의 부흥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먼저 인문정신은 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역사 경험에 증명하듯이 사회적 화해와 발전은 과학기술을 떠날 수 없으나 인문정신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은 새의 두 날개처럼 단독으로는 세계가 직면한 각종 복잡한 문제를 담당할 수 없다. 인문정신을 결여한 고등교육개혁은 교육을 한 방향으로 이끌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인재 양성의 합리성 및 사회 진보의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과학교육과 과학인재의 양성 자체가 인문정신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 과학교육의 건강한 발전은 인문정신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인문정신은 과학교육에 인문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특히 지나치게 분과식 교육을 강조하는 과학교육 시대에 마땅히 인문정신을 중시하는 인문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완성은 지덕체(智德體)의 완성을 통한 정의로운 국가의 실현(플라톤)이며, 이를 위해서는 언술이론과 담론형성을 토대로 한 미완의 프로젝트(Unfinished Project)를 실현할 필요가 있고(하버마스) 이러한 모든 궁극적인 실현의 지향점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이라고(라스웰) 할 수 있다. 결국 국가의 완성은 개인의 존엄성이라는 이상을 구현하는 지덕체를 구비한 공동체의 완성이라고 할 때 이 공동체는 개인들의 인권과 존엄, 자유와 창의를 토대로 자아실현과 자아완성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회를 지칭한다.

역사적 원인으로 자연과학 기술의 발전이 선진 서양 국가에 비해 낙후된 우리는 고등교육에서 자연과학 교육을 더욱 중시하였고, 인문정신과 자연과학 기술 교육의 관계 편견을 가지고 인문정신의 함양과 자연과학 기술 교육

을 분리 대립시켰다. 이는 부지불식간 인문교육에 대한 상대적 경시를 조장하여 자연과학 교육에서 인문정신의 함양을 결여하게 하였다. 그 결과 자연과학교육을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 전수와 기능 훈련으로 단순화시켜 장인과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교육으로 변화시켰다.

V. 인문학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다시 인문학의 위기 문제로 돌아가 보자. 현재의 상황이 인문학의 위기인가 대학의 위기인가? 대학의 위기라면 대학 경영의 위기인가?

대학경영의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등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생존의 위기이다. 대학 교육의 위기는 지나치게 기능인 양성으로 치달은 결과 인문정신 교육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대학의 전문 분야 전공자들이 인문적 소양이 결여되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므로 인문정신을 지닌 적응력이 뛰어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문학과 인문교육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인문학은 취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으나 이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다. 전공으로서의 문학·철학·사학 등 인문학 각 전공은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사회에서는 대학 전문 분야 전공자들의 인문 소양 부족을 지적하면서 인문지식에 대한 갈증을 인문 교양강좌 등으로 메우고 있다. 대학의 인문 전공이 고사의 위기에 처한 반면 사회의 인문정신을 함양하려는 욕구는 높은 상황이다. 사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한 해법으로 기초교양대학을 설치하여 인문학·기초학문 중심의 교과로 구성하여 교육하거나, 학부교육제도를 도입하여 2년간의 학부 과정을 거쳐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높은 취업 압력과 격렬한 경쟁, 광범한 교류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건전한 인격과 안정적인 심리 소양을 익힐 필요가 있다. 그 중요성은 인식하면서 전공교육과 인문소양교육의 필연적인 관계를 도외시킨 채 이들을 분리한 결과 전공교육에서 인문정신 교육이 배제되었고 그 결과는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원인은 사회공동체에

인문정시 도덕의식이 부족한 때문이며, 결국은 고등교육에서 인문 소양 교육을 소홀히 한 탓이라 할 수 있다. 덕의 실현을 자임했던 옛날의 지식인인 선비(士) 정신을 되살려 기능인 엔지니어가 아닌 진정한 지식인 육성을 고민해야 한다.

1959년 5월 7일 영국 학자 스노우(Charls Perry Snow, 1905.10.15.-1980.7.1.)는 과학문화와 인문문화 두 종류의 대립적인 문화가 존재한다고 논하고 이러한 문화상의 분열은 장차 사회에 거대한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두 문화가 분열된 원인은 주로 사람들의 전공 교육에 대한 지나친 숭배와 사회모델을 고정시키려는 경향에 있으며 이러한 분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과학문화와 인문문화를 융합한 신문문화로서 ‘제3의 문화’를 마련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것이다.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었거나 또는 인문학이 변화된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낡은 학문이 되어 학문 자체의 존폐가 달려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전공 이기주의에 몰입하여 불필요한 학문을 고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해법은 인문학 자체의 폐지가 될 것이다. 대학교육의 학문 구조가 잘못되었거나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연의 인재 양성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현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고려하면 사회 병리 현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병리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원적인 해법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문제가 고등교육과 관련된 것은 고등교육 개혁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것이 인문학과 관련된 것이라면 인문학을 바로 세우는 데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문학의 위기’는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다음 두 가지가 주로 거론된다.

먼저 인문학은 대학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운 학문분야이며 전공은 대학원이나 몇몇 대학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대학은 교양 인문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다. 대학 운영은 수지 타산이 맞고가와 직결되는데 교육을 경영 수지로 평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인

교육 원가를 보면 자연과학 특히 의학이나 공학에 비하면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인문대학 등 인문학 분야에서 절약된 비용은 공학, 의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 투입되어 교육 원가 면에서 대학 경영에 ‘기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대규모 국책 과제가 집중된 이공학 분야의 프로젝트에는 일정 비율의 교비 대응 자금이 요구되며, 각 대학은 프로젝트의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응 자금을 기꺼이 투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내 시설이나 기자재 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면 재정적 부담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

다음으로 인문학은 취업이 안되며 따라서 대학평가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취업률 점수를 하향시켜 대학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대학이 우선 폐지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과거로부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기능인 엔지니어 채용에 집착한 결과 인문학 전공자의 경우 졸업 후 1년 이내에 취업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인문계 졸업생들은 2-3년 정도 다양한 사회경험과 자기개발을 거친 후 사회 각 분야에 취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제는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취업률에 반영이 안되는 점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종합적 판단 능력을 지닌 인문학 전공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산업현장 인력의 경우에도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다. 공공분야나 산업계에 복잡하게 얽힌 현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리려면 인문학 전공자나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인재가 필수적이다. 기업이나 사회에서 인문학 학습 열기가 높은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인문 교양강좌나 인문서적 몇 권으로 인문 소양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바람직한 해법은 정확한 진단과 종합적인 처방이다. 어느 집단이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부분적, 단기적, 대중적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지만 종합적인 처방에 의해 집단 자체의 건전성을 회복하게 한다면 나머지 작은 문제들은 스스로의 치유능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위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미 ‘Hell 조선’으로 회자되듯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가 낳은 복합적이고 심각한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어 중증 환자와 같다. 대학 구조조정은 이에 대한 처방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높은 실업률에 고통받는 현실에서 기업은 대학에 맞춤형 인재를 양성

해 내라고 주문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대학과 공동으로 전공 과정을 운영하기까지 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양성된 인력이 이직하거나 실직할 경우 재취업이 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특정 전공을 집중 교육하는 이들 과정은 대부분 인문학적 소양을 접하기 어려우며 결국 소통능력 부족과 적응력 부족으로 기업과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소통을 위해서는 자기주장과 판단능력 그리고 소통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종합적인 분석과 사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문학적 소양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의 선행 모델이었던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급속한 산업화에 매진한 결과 단기간에 고도의 산업화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사회에는 각종 폐단이 만연하는 결과를 맞았다. 산업사회의 폐해로 지적되는 개인의 소외, 윤리 도덕의 상실, 성공 제일주의, 가족과 사회의 해체 등이 그것이다. 30년 전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법을 고민하던 문부과학성은 종합적 처방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시행에 옮길 경우 이들 폐단을 키워 온 지난 50년의 2배에 달하는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 산업화 이전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내놓았다. 그 해결 단계는 가정과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과위주, 황금만능주의 등 산업사회의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인문 정신을 회복시켜 ‘생각하는 사람’을 교육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되 먼저 가장 우수한 인재를 교육자로 육성하고, 이들을 교육 현장에 배치하는 동시에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며, 한 세대인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새로운 교육을 받은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며,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은 인재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 가는 것이었다.

사회에 만연한 산업화의 폐단을 되돌리는 데에 적어도 한 세기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문제 해결에 이처럼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는 교육이 필요한 때문이다. 교육을 통한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

VI. 맺음말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 자체에서 비롯된 위기도 아니며, 취업문제 때문도 아니며, 입학성 모집의 문제도 아니며, 대학 경영 문제도 아니다. 인문학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 자체가 인문학의 위기요, 고등교육의 위기요, 나아가 국가 사회의 위기라 할 수 있다.

사회의 위기가 인문정신, 인문소양의 부족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중등교육은 물론 모든 고등교육 수혜자에게 인문 소양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인문학 관련 전공을 축소·폐지하고 교양 과정에서 인문학을 교육하는 것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인문 교양교육을 담당할 인력 충원을 위해서라도 인문학 전공은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나아가 인문학은 이미 더 이상의 연구가 필요 없는 분야가 결코 아니며 여전히 새로운 연구를 기다리는 과제가 산적해 있고 또 지속적으로 과제가 쌓이고 있다. 따라서 전공 교과는 더욱 육성 발전시키고 교양 교육을 체계화하여 대학의 모든 전공 분야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익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처한 현 상황은 인문학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문학을 육성하고 사회 문제의 해결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과 대학은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끝)



Session II

좌장: 조광순
(아주대학교 교수)

－ 회사가 바라보는 인문학 전공자란?

김경원(세종대학교 경영대학장, 전 대성합동지주 사장)

－ 교육부의 인문학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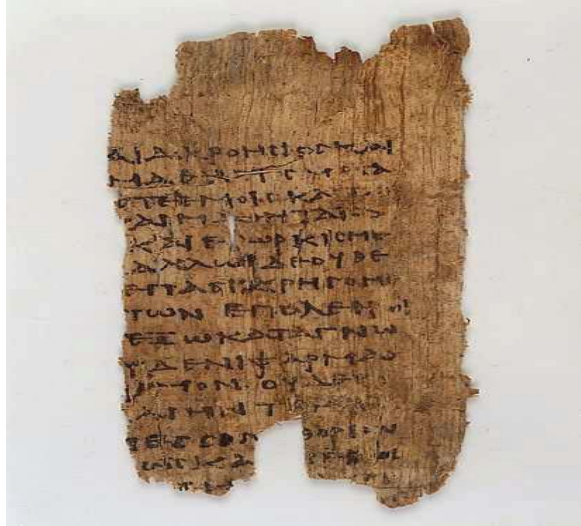
고영종(교육부 학술진흥과장)

회사가 바라보는 인문학 전공자란?

2016.9.
세종대학교 김경원

- 직장인과 직장암
 - Cancer의 어원은 라틴어 cancer(crab)
 - 히포크라테스(BC 460–370)가 karkinos(καρκίνος: crab)라고 부른 데서 비롯
 - ※ Galen(AD 130–200)는 암을 oncos(swelling)이라 부름 ⇒ “oncology”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존던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 No man is an island,
Entire of itself.
Each is a piece of the continent,
A part of the main.
If a clod be washed away by the sea,
Europe is the less.
As well as if a promontory were.
As well as if a manor of thine own
Or of thine friend's were.
Each man's death diminishes me,
For I am involved in mankind.
Therefore, send not to know
For whom the bell tolls,
It tolls for thee.

한 인문학 전공자의 경험

- 아부다비의 협상
- “인문학적 소양”은 교육학에서 말하는 ‘발달과업’ 같은 것 → 친구 사귀기, 연애했던 제 나이에 경험하지 못하면 다시는 ‘제대로’ 경험하거나 갖추지 못할 것들
- 인문학적 소양은 평생 지속되며, 평생 동안 창의를 원천
- 직급이 올라갈수록 전문분야보다 훨씬 더 경쟁력있고 유용한 자산

인문학 전공자의 착각

- 회사의 나의 ‘깊이’와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인문학 전공자들은 당장의 실무능력은 떨어지지만 창의력이 뛰어나다
 - 인문학 전공자들은 감성이 풍부해 소비자의 감성을 잘 읽을 수 있다
 - 인문학 전공자들은 표현력과 복합적 사고에 뛰어나 고객설득이나 회사 안에서의 융화도 잘한다
 - 인문학 전공자들은 ‘인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대고객 업무는 물론 인사 부서 등 사내 대인 업무에 최적이다.
- ⇒ 얼마나 맞는 말일까요?

회사의 착각

- 인문학 전공자는 훈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채용 가성비’가 낮다.
 - 인문학 전공자는 과학적 사고가 부족하다 분석적인 일에 투입하지 못한다.
 - 인문학 전공자는 훈련을 시켜도 생각이 많아 고분고분하지 않고 회사 생활에 염증을 느껴 중도탈락률이 높다.
 - 인문학 전공자가 창의력이 있다고 하는데 뽑아보면 그다지 창의력이 돋보이지 않는 것 같다
 - 어문학 전공자는 필요 없다. 경영, 경제 출신들을 뽑아 어학을 공부시키는 것이 훨씬 낫다.
- ⇒ 사실일까요?

(직장) 프로의 자존심

프로는 자존심으로 산다

1. 프로는 주인의식과 책임감으로 일한다
2. 프로는 양심과 선의로 일한다
3. 프로는 나는 낮추고 다른 이는 차별하지 않고 귀하게 여긴다
4. 프로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
5. 프로는 부당한 권위와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다
6. 프로는 먹던 우물에 침 뱉지 않는다

**인문학 전공자는
어느 전공자보다 프로의 자존심
을 잘 지킬 수 있는 존재!**

인문학 전공자들의 과제

- 경영, 경제에 대한 소양 (좌뇌+우뇌) ‘
- 어학 능력은 전공자의 경우 원어민 수준을 목표
- 자기 전공과 세상의 현상을 맞추어 보는 연습

교육부의 인문학 정책방향

고 영 중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I. 인문학 정책 개요

1. 인문학의 중요성

금년 3월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대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언컨대, 그것은 인간의 창의성과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인류발전에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새로운 과학기술의 바탕에 집단지성과 창의성의 원천이 되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무언가 할 줄 아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학문인 인문학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미래 발전과 창조의 바탕이 된다는 의미에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교육부의 인문학 진흥정책은 단순히 연구자들의 인문학 연구를 지원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연구 성과가 사회 속에서 공유되고 확산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풍성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인문학 진흥정책의 목적

인문학 진흥 정책은 1979년 12월에 제정된 학술진흥법(2005년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2011년 학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진흥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한 부분이므로 학술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 분야로서의 인문학 진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인문학 진흥정책의 목적은 첫째, 연구자들이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 생태계를 조성 지원하는 것이며, 둘째, 인문학과 대중과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인문학의 외연을 확대하고, 학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6.2월 제정되고, 8월부터 시행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법률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인문학 진흥정책의 역사

1963년, 문교부(현 교육부)가 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술연구조성비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인문사회분야 교수들의 연구비 지원이 처음 시작 되었습니다. 특히 1981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출범은 지금의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체제가 구축되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은 인문학 진흥의 역사적 계기가 되는 한 해였습니다. 2006년, 전국의 인문대학장들이 인문주간(Humanities Week) 행사 개막식에서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하고 인문학 진흥을 위한 결의를 다졌으며, 이와 함께 2007년 연간 400억 수준의 인문학진흥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인문한국(HK, Humanities Korea)사업, 저술출판지원사업, 인문학대중화사업, 인문전략연구사업 등이 있습니다.

4. 인문학 지원 예산

교육부가 지원하는 인문학 관련 지원 예산(인문사회기초연구 예산 포함)은 1963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최근 10년간 인문사회기초연구사업과 인문학진흥사업에서 연평균 1,61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16년 현재 총 2,000억 원 정도가 인문사회분야 연구 진흥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표1. 연도별 인문학 지원 예산]

(단위 : 억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문사회기초연구	707	722	819	1,075	1,308	1,291	1,276	1,329	1,349	1,364
인문학진흥	255	388	464	484	484	506	521	599	619	614
계	962	1,110	1,283	1,559	1,792	1,797	1,797	1,928	1,968	1,978

올해 인문사회기초연구사업의 사업별 예산은 학문후속세대 사업 342억원, 개인기초연구(신진-중견-우수학자) 342억원, 공동연구(일반공동, 학제간융합) 260억원, 연구소 단위 집단연구(신흥지역연구, 대학중점연구소, 토대연구) 396억원, 기타(우수논문, 명저번역) 24억원으로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 및 집단연구 사업에 예산이 비슷한 규모로 배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진흥 사업의 사업별 예산은 인문한국(HK) 430억원, 저술출판 63억원, 인문학대중화 53억원, 인문전략연구 20억원 기타(우수학술도서, 기초교양교육) 48억원으로 2007년 전국 인문학자들의 인문학진흥을 위한 결의 후 시행된 인문한국 사업의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학문적 성과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급하여 대중과의 소통 및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인문학대중화 사업도 적지 않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연구자의 생애주기별 개인연구 지원 과제 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인문사회기초연구 예산을 '16년 대비 15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잠재력 있는 박사급 연구자에게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학술연구 활동의 지속성 유지와 연구력 향상을 위하여 박사후국내연수사업의 예산을 21억원(전년대비 29%) 증액하였고, 연구자의 성장단계별(신진-중견-우수학자)로 지원하여 국가 연구역량을 제고 및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기초연구(신진-중견-우수학자) 예산을 129억원(전년대비 38%) 증액하였습니다.

인문학진흥사업은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지침(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재

량지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 구조개혁, 성장동력 확충 관련 사업 등에 절감재원 재투자)에 따라 예산이 '16년 대비 82억원 감액되었지만, 인문한국 신규 예산을 82억원 정도 확보하여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II. 인문학 정책 사업내용

1. 사업현황

현재 인문학분야의 학술연구 사업에는 크게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대해 연구형태별(개인-공동), 연구자 성장단계별(신진-중견-우수)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과 사회적 적실성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소 육성 및 인문학과 대중과의 소통 확대 등을 통해 인문학을 진흥하기 위한 ‘인문학진흥’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은 8개의 내역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① 박사학위 연구자에게 연구기관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대학연구소에서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여 학술·연구 활동의 지속성 유지하게 하거나 연구환경이 열악한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에게 연구기회를 제공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 유도하는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¹⁾’, ② 인문사회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거나 집단 지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반연구자지원사업²⁾’, ③ 인문사회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가진 우수학자를 지원하는 ‘우수학자지원사업’, ④ 명저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번역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동·서양 명저에 대한 접근성 제고하기 위한 ‘명저번역사업’, ⑤ 신흥지역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연구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전문가 양성하기 위한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⑥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상상력과 통찰력, 예술적 창조성과 과학적 합리성 등을 융합하여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하기 위한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⑦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지원하여 대학 내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고, 대학의 전반적 연구역량 강화하기 위한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⑧ 인문사회분야의

1) 학문후속세대사업 : 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

2)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신진연구, 중견연구, 일반공동연구, 우수논문

토대연구지원을 통해 지식생산의 원천 제공 및 독창적 연구이론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하기 위한 ‘토대연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문한진흥 사업은 6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분되며, ① 대학 내 ‘연구소’ 중심의 연구체제를 확립하여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하기 위한 ‘인문학한국(HK)지원사업’, ② 우수한 인문·사회과학자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저술·발간을 지원함으로써 학술성과 및 연구경험 축적 및 연구성과의 소통가능성 제고하기 위한 ‘저술출판지원사업’, ③ 어문학, 철학, 사회과학 및 예술·체육학 분야에서 대중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인문학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여 인문학 진흥을 도모하는 ‘인문학대중화사업³⁾’, ④ 사회문제 해결, 국가 미래 전략분야 등 국가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분야 및 아젠다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인문전략연구사업⁴⁾’, ⑤ 기초학문분야의 우수 학술도서를 선정하여 대학, 연구소 등에 보급함으로써 기초학문분야 연구 및 저술 활동 활성화, 기초학문분야 우수연구성과 확산 및 공유 도모하는 ‘우수학술도서사업’, ⑥ 인문학 기반 대학 교양교육과정을 확산 및 내실화 하고 기초교양교육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교양교육사업’입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문학적 사고력과 상상력 등 인문소양을 갖춘 인재 육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운데 대학 구조개혁으로 인한 인문학의 교육·연구 축소 우려를 적극 해소하고, 인문대학에 대한 적극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토대로서 인문학 진흥을 위해 2016년부터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⁵⁾)을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코어사업은 각 대학의 여건 및 특징에 최적화된 인문학 교육·연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지역학 모델, 인문기반 융합전공 모델, 기초학문심화 모델, 대학 자체 모델 등 5개 모델을 예시로 제시하여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발전모델 예시를 참고로 다양한 모델을 구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 인문학대중화사업 : 석학인문강좌, 인문도시, 시민인문강좌, 인문주간, 세계인문학포럼, 한중인문학포럼, 성과확산 및 홍보

4) 인문전략연구사업 : 인문학국제사업, 디지털인문학사업, 인문브릿지사업

5) CORE :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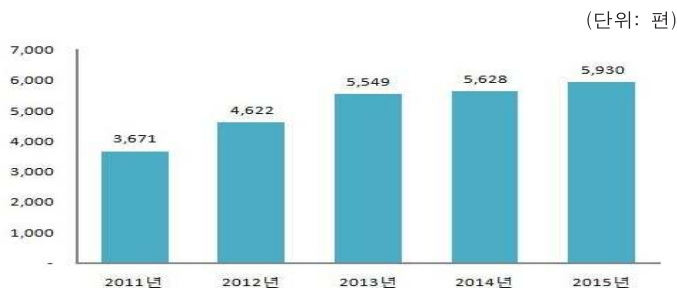
(글로벌 지역학) 언어권별로 세계 각 지역에 특화된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을 위해 관련 학과 및 연구소를 결합하여 지역학 교육-연구 거점 구축
 (인문기반 융합전공) 인문학과 경영, 디자인, IT, CT 등 다양한 실용학문을 융합하여 사회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체제로 발전
 (기초학문심화) 인문학 연구기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외국 대학에 양도되고 있는 기초 학문분야 우수인재 양성 책무를 국내대학이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기초교양대학) 인문학이 대학 전체 학생들의 기초교육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문소양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에 기여
 (자체모델) 대학 자체적으로 구상

현재 1차 선정 16개 대학, 2차 선정 3개 대학 등 총 19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문대학에 지원되는 최초의 시범사업임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우수모델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9.29. CORE사업 출범식 개최)

2. 사업성과

지속적인 인문학 진흥정책의 추진으로 인문사회분야의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인문사회기초연구 및 인문학진흥사업의 성과물로 논문 숫자가 매년 증가하여 '15년에는 '11년 대비 61.5%('11년 3,671편) 증가한 5,930편이 발간되었습니다. 아울러, SCI급 논문 숫자도 '11년 161편에서 '15년 285편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도표1. 논문 성과 증가 추이⁶⁾]



6) 자료출처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특히, HK연구소는 인문학분야 인력양성과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연구소 설립을 통해 대학의 인문학 연구를 학과중심에서 연구소 기반의 연구로의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들 연구소를 통하여 해당 분야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연구의 중심점을 확보하고, 인문학분야 연구지원과 성과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의 개인 중심의 학술적 논문연구에서 공동연구체제를 기반으로 사회와의 교감을 통한 궁극적인 인문학의 과제 해결의 국면으로 전환하게 하였습니다. 우선, 연간 사업비 1.5억원 당 1명 이상 정년 트랙 전임교수를 확보해야하는 규정에 따라 현재 215명의 우수한 인문학자가 전임교수의 신분으로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주축으로 하여 HK연구소는 (2015년 10월 기준) 총 6,133편의 논문, 2,148권의 저역서를 간행하였습니다. 이는 HK연구인력 1명당 연평균 약 2.3편의 논문과 약 0.6권의 저서, 0.2권의 역서를 발표한 실적으로 1인당 연평균 3.1편의 연구성과를 산출할 것이며, 인문학분야 전임교원의 연간 연구실적(논문 0.81편, 저서 0.19권) 평균보다 3배 높은 성과입니다.

이외에도 학술연구 기초 자료의 축적과 공유 시스템 구축(총 527,197건), 국내/국제학술지 창간 및 발간(총 1,607호),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연구성과의 대중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대중화사업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문학자들이 사회로 나오게 하여 석학인문강좌⁷⁾, 시민인문강좌⁸⁾ 등 대중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 인문학 총서를 발간하여 일반 시민들과의 교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인문주간,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등 다양한 인문학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중이 인문사회분야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표2. 연도별 인문주간 참여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평균)
참여기관수	33	36	38	46	53	41
참여인원	55,127	63,869	66,237	67,091	82,028	66,870

7) 석학인문강좌 : 국내의 최고 인문학자의 연속 공개강좌와 저술방송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이해 도모

8) 시민인문강좌 : 지역특성 연계 및 청소년, 소외계층(노숙인, 교도소 수감자) 등 다양한 계층 대상의 인문강좌 개설·운영

[표3. 연도별 세계인문학포럼 참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1회)	2012(2회)	2014(3회)	비고
개최지	부산	부산	대전	
참여인원	1,804	2,538	2,601	

※ 2016년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 2016.10.27.~10.29. / 수원시(아주대학교)

Ⅲ. 인문학 진흥을 위한 법령

1. 법령 제정 목적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 3일 제정되었습니다.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을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며, 지속 가능한 인문학 생태계의 구축 및 발전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정부는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통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법령 주요내용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운영, ②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담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③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④ 초·중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 실시,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⑥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업무 전담기관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16년 8월 동

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일정, 인문교육 실시기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중앙부처(교육부, 문체부, 기재부, 외교부, 행자부, 여가부, 문화재청) 차관급 공무원 7명과 전담기관의 장 2명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 단체 등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진흥심의회 구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으로 구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방향 및 인문학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IV. 인문학 정책의 과제

최근 들어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인문학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급변하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각종 위기에 대한 해법을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찾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통찰력, 지혜, 조화로운 감성 등 인문학을 기초로 한 통섭적 사고는 우리가 처한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판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새로운 대안이자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인문학이 사회적 기여를 통해 ‘사회적 책무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학은 사람에 관한 학문인데, 대중과의 소통 없이 상아탑 속에만 머무는 인문학은 진정한 인문학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고 대중을 품는 ‘모두의 인문학’이 되어야 합니다. 인문학진흥법에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및 소년원, 교정시설, 민영교도소 등 취약기관에서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학교 시험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가져

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살펴보고 자신의 길을 찾는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중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없는 가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문학 확산이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지원하는 인문학 대중화 시도기였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시행에 따라 인문학 수요를 창출하여 적극적으로 인문학을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표4. 인문학대중화 중장기 정책]

기간	사업 방향
2007~2011년	대중화 시도기 (대중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 창출, 각계의 자생적 활동 지원)
2012~2016년	대중화 정착기 (대중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장 및 지원 체계화)
2017~2022년	대중화 확산기 (법령을 근거로 인문학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

이를 위한 첫 걸음은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이 될 것입니다. 인문학계 및 정책현장의 의견을 널리 수용하고 여러 방면으로 숙고하여 인문학의 진흥을 위한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Group Discussion

좌장: 백영서
(연세대학교 인문대학장)

토론자

- 조성택(고려대학교 교수)
- 박찬길(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김기봉(경기대학교 교수)
- 문혜원(아주대학교 교수)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blank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approximately 20 evenly spaced, light gray horizontal lines across the entir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plain white, and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present.

[illegible]

[illegible]



[부록1]전국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회원교 명단

[부록2]2016년도 전국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 임원 명단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회원교 명단

no	회원교		no	회원교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교명	단과대학명
1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24	성신여대	인문과학대학
2	경남대학교	문과대학	25	세종대학교	인문과학대학
3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26	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4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27	승실대학교	인문대학
5	계명대학교	인문국제대학	28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6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29	안양대학교	인문대학
7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30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8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31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9	국민대학교	문과대학	32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10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33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11	대구대학교	인문대학	34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12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35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13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36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14	동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37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15	동아대	인문과학대학	38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16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39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17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40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	인문대학
18	삼육대학교	인문사회대학	41	한신대학교	인문대학
19	상명대학교(서울)	인문사회과학대학	42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20	상명대학교(천안)	어문대학	43	협성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21	상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44	호서대학교	인문융합대학
22	성결대학교	인문대학	45	홍익대학교	문과대학
23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2016년도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회장 및 임원

구분	소속대학		성명
회장	아주대학교		박만규
부회장	경희대학교		김중복
	성신여자대학교		심치열
	세종대학교		탁진영
	원광대학교		이숙향
	조선대학교		최진규
	홍익대학교		김종규
감사	광운대학교		최기용
	울산대학교		김두현
이사	강원지역	상지대학교	최병문
	충청지역	청주대학교	김희숙
	경북지역	대구대학교	허영은
	부산/경남	동아대학교	박은경
	수도권	고려대학교	이재훈
		이화여자대학교	박창원
		연세대학교	백영서